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지만, 계획 여건의 변동 등으로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무총리가 확정된 집행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은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하는 자원조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 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경우,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인력자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인력자원 대상자에게 미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송부하고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인력자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였는데, 거짓 신고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3. A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에 甲과 乙에게 인력의 참여 협력에 대한 동의를 문서로 받았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참여 협력 요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②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甲이 1주일 참여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 지원에 드는 비용은 甲이 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 ③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乙이 1일 참여한 경우에 乙에게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에 따라 甲과 乙이 참여하고 있던 중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甲과 乙의 참여는 중지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과 乙의 참여를 연장할 수 있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자에게 지정된 사실만을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미리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 ③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술훈련을 명할 수 있다.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는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나) 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다) 까지 (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1월 31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②	국무총리	대통령	1월 31일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	2월 말일	행정안전부장관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국무총리	2월 말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 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는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지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가)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나) 이내

- | | <u>(가)</u> | <u>(나)</u> |
|-------|------------|------------|
| ① 10일 | | 60일 |
| ② 10일 | | 90일 |
| ③ 14일 | | 60일 |
| ④ 14일 | | 90일 |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④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 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 ㄷ. 동시관리훈련을 포함하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 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정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③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광역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
-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특별시·광역시·도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훈련 및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한다.
 - ③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가 상황에 적합한 방법인 경우에 이를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 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② 장애 보상금 중 5급 장애등급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사망 보상금의 7/12의 금액이다.
 - ③ 읍·면·동장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 실비변상 등에 대한 설명 중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공작물·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가)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나)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다)을/를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가)	(나)	(다)
①	2	20	10
②	2	30	10
③	3	30	15
④	3	30	20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 ②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 ③ 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보상금 지급 중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표 중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눈이 실명[맹(盲) 또는 광각상실(光角喪失)]되거나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 ③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④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戰時)에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 ㄴ.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 ㄷ.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 ㄹ.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7.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210일 이내인 비상근 예비군을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한다.
- ㄴ. 비상근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은 이들의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 ㄷ.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상근 예비군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 예비군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ㄹ. 평시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문 28.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동원명령 발령 후 (가)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동원명령을 연기할 수 없다.
-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를 (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 (다) 이하의 징역 또는 (라) 이하의 벌금이나 (마)에 처한다.

	(가)	(나)	(다)	(라)	(마)
①	6시간	과실	1개월	200만원	과료
②	6시간	고의	3개월	300만원	구류
③	7시간	과실	1개월	300만원	구류
④	7시간	고의	3개월	200만원	과료

문 29.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 출동한 예비군은 무장공비의 소멸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상 물품 관리관으로 본다.
-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가)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나)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다) 전까지, 단 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 (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6일	30일	10일	3일
②	6일	20일	10일	5일
③	7일	30일	12일	3일
④	7일	20일	12일	5일

문 31. 예비군법령상 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이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예비군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소속 예비군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예비군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예비군대원에게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34.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조명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 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면서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하면 된다.
- ㄷ.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긴급조치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문 35.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작전을 지휘한다.
- ③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④ 경찰서장은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방송협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ㄴ.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 ㄷ.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ㄹ.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대학에서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 ㅁ.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인 사람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없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③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는 위원장 1명 이외에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 ③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된 재난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
-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며,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②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④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자치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
- 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ㄷ.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ㄹ.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자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둔다.
- ④ 지역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책조정 위원회의 사무(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 ㄴ.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ㄷ.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 ㄹ.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ㅁ.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재난방송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하며,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ㄷ.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원봉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 때 반환금의 징수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시설 분야’는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②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는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③ ‘생활 및 여가 분야’는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 각종 공사장에서의 주변 시설물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 ④ ‘보건·식품 분야’는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을 그 범위로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가입의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